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의식조사의 결과와 의미

이 글에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98년 11월초에서 12월초까지 약 한 달동안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노동자와 민중을 위한 독자정당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정영태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 새로운 정당건설에 대한 노동자들의 낮은 참여도

정리해고와 장기(長期) 고실업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민중(또는 국민)의 독자정당건설운동 또는 진보정당건설운동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아니 이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¹⁾ 민주노총은 97년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1998~99년 사이에 독자정당을 건설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97년 9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권영길 전(前)민주노총위원장을 대선후보로 지지할 것을 결의하였고, 98년 6월 지방선거에도 노동계(민주노총 또는 국민승리21)후보를 대거 출마시켰다. 한국노총은 2004년 총선무렵 '노동자와 국민대중의 독자정당'을 건설한다는 중장기적인 목표 하에 지난 97년 대선에서는 국민회의와의 정책연합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노동계후보와 친노동계후보를 출마·당선시킴으로써 독자정당의 건설에 필요한 인적·정치적 자원을

1) 서구의 경험을 보면, 공황기에는 혁명적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의 시기가 만약 고전적인 의미의 공황기이든 아니든간에, 1920~30년대의 공황기와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의 공황기적 양태(즉, 고실업 등)는 자본이 자기통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해서가 아니라 상당부분 의도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점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자본의 노동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르다는 생각이다.



‘국민승리21’은 오는 5월 창당을 목표로 교육과 선전, 조직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년진보당’은 작년 11월에 창당대회를 마친 뒤 지역조직을 강화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다.

축적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독자정당건설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국민승리21’은 오는 5월 창당을 목표로 교육과 선전, 조직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년진보당’은 작년 11월에 창당대회를 마친 뒤 지역조직을 강화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다.

이처럼 전보적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노동자와 민중(또는 국민대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움직임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새로운 정당의 가장 중요한 지지기반이 될 노동자들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한 것 같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최근에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²⁾ 이전의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노동자들의 기존정당에 대한 불신이 해가 갈수록 높아만 가고(표1),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당장 건설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은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40~70%에 이르렀으며(뒤의 표2) 참

2)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는 지난 98년 11월 7일부터 7일간 서울 부산 대구 등 6대 광역시와 경기도, 충청, 경남 등 총 9개 지역에 있는 민주노총 소속 27개 노동조합의 640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들 응답자의 속성별로 보면, 지역별로는 서울 68명, 부산 65명, 대구 25명, 인천 30명, 광주 108명, 대전 29명, 울산 81명, 경기 166명, 충북 36명, 경남 32명 등과 같고, 소속산업별로는 건설산업연맹 8명, 공익노조 29명, 민주금속연맹 307명, 민주철도연맹 65명, 민주화학연맹 125명, 포진의료노조 101명, 사무노조 7명 등과 같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432명, 운수철도통신업 65명, 금융보험사업서비스업 61명, 공공가민서비스업 76명 등과 같다. 기업규모별로는 10,000명 이상 사업장 65명, 1,000~9,999명 사업장 225명, 999명 이하 사업장 355명 등과 같다.

〈표1〉 지지정당

년도	구분	한나라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국민회의 (평민당, 민주당)	자민련 (공화당)	국민당	국민신당	신정당	국승21 (민중당, 정보정치 세력)	기타	없음	잘 모름
89년	민주노총	-	-	-	-	-	-	-	-	-	-
	한국노총	8.2	23.6	5.3	-	-	-	-	-	42.1	-
92년	전 노 협	2.6	35.6	-	1.5	-	3.6	12.4	-	32.5	11.9
	한국노총	8.3	26.4	-	6.8	-	3.1	11.0	-	33.5	10.8
93년	전 노 협	10.3	28.9	-	1.0	-	12.4	16.5	-	30.9	-
	한국노총	15.8	32.2	-	2.0	-	7.7	10.4	-	31.8	-
94년	전 노 협	13.9	31.5	-	1.7	-	7.8	10.6	-	34.4	-
	민주노총	7.5	30.8	-	2.0	-	4.0	19.4	-	36.0	-
97년	한국노총	12.4	34.3	-	0.8	-	5.3	8.7	-	41.0	-
	한국노총	25.0	25.0	-	1.8	-	7.9	5.6	0.3	34.4	-
98년	민주노총	-	-	-	-	-	-	-	-	-	-
	한국노총	16.8	19.0	10.9	-	-	-	-	6.0	47.1	-
98년	민주노총	0.8	7.3	0.5	-	-	-	44.8	0.8	32.8	13.0
	한국노총	6.0	17.3	2.6	-	-	-	6.2	-	54.4	13.5

* 출처: 89년 - 「한국노동자의식연구」(한국노총 1990)
 92~94년 - 전국노동자신문사와 필자의 공동조사(윤진호 정영태, 「한국노총과 전노대의 조합원의식 비교연구」, 《사회·경제평론》 제8집 (1995))
 94년(아래 줄) - 「한국노동자 정치의식연구II」(한국노총 1994)
 97년 - 「한국노동자 정치의식연구III」(한국노총 1997)
 98년 - 민주노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1998.11), 한국노총: 한국노총 조사(1998.10)

조), 새로운 정당건설은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80%에 육박하고 있다(〈표5〉 참조).

이러한 노동자들의 의식이나 기대를 감안할 경우 새로운 독자정당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동자들이 실제로 보여주는 행태는 국민승리21이나 청년진보당 등 진보정당추진세력에게는 실망스러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해답을 구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독자정당의 건설이 무망함은 물론 한국정치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제도정치권(예, 국회)에는 보수일변도의 반노동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³⁾

각설하고 적지 않은 노동자들은 노조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법이나

〈표2〉 노동자와 민중(국민)을 위한 독자정당건설

노동자정당의 필요성	1989		1992		1993		1994		1997	1998
	노총	전노협	노총	전노협	노총	전노대	노총	노총	노총	민주노총
당장 건설해야	68.7	58.8	51.9	60.8	60.5	63.5	64.7	60.5	56.2	40.2
여건상 어려워	22.8	26.6	28.3	30.9	30.5	26.6	27.3	28.5	12.0	45.8 ²⁾
대변정당 있어		6.0	9.8	5.2	5.4	3.6	2.5	4.2	4.7	3.3
전혀 불필요	7.5	4.0	3.5	0.0	1.5	0.4	0.8	2.6	11.9 ¹⁾	-
잘 모르겠다	-	4.5	6.4	3.1	2.2	6.0	2.8	4.2	15.1	10.7

주: 1) '노조가 정치를 하면 안됨'의 비율

2) '법이나 제도상의 제약'이라는 응답자(19.8%)와, '노동자의 낮은 정치의식'이라는 응답자(26%)의 합

* 출처: 89년 - 『한국노동자의식연구』(한국노총 1990)

92~94년 - 전국노동자신문사와 필자의 공동조사(윤진호 정영태, 『한국노총과 전노대의 조합원의식 비교연구』, 《사회·경제평론》 제8집 (1995))

94년(아래 줄) - 『한국노동자 정치의식연구II』(한국노총 1994)

97년 - 『한국노동자 정치의식연구III』(한국노총 1997)

98년 - 민주노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1998.11)

제도(예, 국가보안법, 선거법, 정당법 등) 또는 기존 정당이 지역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지방정부나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기득권(premium)과 새로운 정당의 등장에 대한 경계와 방해 등과 같은, 노동자 바깥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조건이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표3〉). 이러한 생각이 과연 옳은가, 아니 바람직한가?

진보적인 노동자정당이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서구나 일부 제3세계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의 객관적 여건은 대단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노동자정당이 힘있게 건설되지 못하는 이유를 모두 설명할 수도 없고, 또한 그래서도 안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객관적 여건은 인간(특히 조직화된 집단)의 의지와 힘에 의해서 형성·유지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법이나 제도(예, 국가보안법)는 그것으로 인하여 혜택을 얻

3) 이러한 제도정착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김대통령과 국민회의, 특히 전자에 대한 평가가 필자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김대통령의 이념적 내지 정책적 입장은 미국식 주주중심 자본주의(stockholder capitalism) 내지 (신자유주의의 하위부류인) 질서자유주의(order capitalism)에다가 대미중속성이 가미된, 기본적으로 중속적 신자유주의(dependent neoliberalism)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김대중정권이 노동기본권(특히 노동의 정치적 시민권)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또는 신보수주의)와는 분명한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김정권이 이러한 측면을 가졌다고 해서 신자유주의정권이 아니라고 하거나 노동자를 위한 정권이라고 해서 안된다. 그것은 우선 경제분야에서의 신자유주의는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선거에서의 투표에 한정시키는 정치적인 다원주의(보다 정확하게는 다두제 polyarchy)와 병립할 수 있으며, 노사정위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에 노동단체나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것도 의제나 정책의 내용이 신자유주의적이거나(예, 자본에 대한 '비생산적인'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다두제적인 것(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인권보장, 정치비용의 절감 등)에 한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정권의 성격과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정영태, 1998a, 1998b)와 《한겨레21》제241호 (1999.1.14)를 참조할 것.

거나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인간(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⁴⁾ 이 점을 인정한다면, 노동자정당이 아직 건설되지 않은 사실을 설명하거나 앞으로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여건에만 의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인지 분명해질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와 민중을 위한 독자정당이 건설되지 않은 사실을 설명하거나 독자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독자정당의 건설과 성공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주체들, 즉 정당추진세력(예, 국승21이나 청년진보당 또는 전위정치조직추진세력)과 노조지도부, 그리고 노동자(와 일반민중)와 관련된 요인을 찾아내야 한다.

〈표3〉 노동자정당 건설과정의 장애요인

노동자건설 장애요인	1순위	2순위	1순위 + 2순위
노동계의 단결을 저해하는 지역감정	13.4	3.1	16.5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법률	45.3	15.1	60.4
기존 정당과 정치인의 기득권과 방해	20.6	24.2	44.8
과다하게 요구되는 정치자금	3.4	11.0	14.4
임단투에 집중하는 경제주의적 노조활동	5.2	9.6	14.8
일반노동자와 유리된 상층부 중심 정당건설방식	6.8	13.7	20.5
노동조합의 미약한 조직역량	3.6	19.9	23.5
기 타	0.0	0.7	0.7
잘 모르겠다	1.7	2.6	4.3
인 원	591	582	1173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글에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98년 11월초에서 12월초까지 약 한 달동안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노동자와 민중을 위한 독자정당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들은 어떤 성격의 정당을 바라고 있으며, 그것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건설하기를 원하며, 언제 건설했으면 하는가? 둘째,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의 독자정당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4) 알렉스 캘리니코스, 1987: 제2장).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법이나 제도 등 소위 객관적 여건의 존재는 그로 인해 득을 보거나 볼 것으로 기대하는 집단과,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집단간의 대립과 투쟁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법이나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착취를 당하는 이들은 때로는 자신이 고통스러운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때로는 슬권적으로, 때로는 알아도 그것을 바꿀 힘이 없어서 체념함으로써 자신을 구속하는 법이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이 건설될 정당의 지지기반을 보면
압도적인 다수의 노동자들은 새로이 건설될 정당은 '노동자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이해를 반영하는 정당' 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

2. 노동자와 민중을 위한 새로운 정당의 성격과 건설방식

먼저, 새로이 건설될 정당의 지지기반을 보면 압도적인 다수의 노동자들은 새로이 건설될 정당은 '노동자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이해를 반영하는 정당' 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물론, 응답자가 속해 있는 산별연맹이나 업종 또는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이라는 똑같은 조건 하에서의 차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압도적인 다수의 노동자들은 새 정당이 노동자와 전국민의 정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결론짓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표4〉의 맨앞 칸). 이러한 노동자들의 인식은 새 정당의 조직적 특성에 대한 인식과 대체로 부합된다 하겠다. 98년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92년의 조사에는 포함시켰던 정당의 유형을 보면, 노동자를 위한 정당은 합법대중정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동자가 4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국연합과 같은 느슨한 연합체(14%), 사노맹과 같은 비합법전위정당(5%) 등으로 합법대중정당이 가장 많았다.⁵⁾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들어 더욱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또한 곧 보게될 노동자들의 이념적 정향성과도 대체로 합치된다.

다음, 새로이 건설될 정당의 정책강령에 대해서는 알아보면, ① 재벌해체, ② 노동시간단축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에 의한 고용안정, ③ 노동자나 노조의 경영참가, ④ 사회복지나 환경을 희생하지 않는 방식에 의한 경제회복 등에 대해서는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⑤ 외국인투자유치와 ⑥ 국공영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의 노동자들이 지지하고 있으나, 앞의 네 가지 정책보다는 지지의 강도(intensity)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속성에 따른 편차도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표4〉의 두 번째 칸

5) 이러한 경향은 응답자가 속해 있는 상급노조의 성격에 관계없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합법대중정당(노총 44.4%, 전노협 42.6%), 비합전위정당(노총 5.3%, 전노협 5.8%), 연합체(노총 14.0%, 전노협 13.7%), 모르겠다(노총 36.3%, 전노협 37.9%) 등과 같다.

부터 일곱 번째 칸까지). 다시 말하면, 앞의 네 가지 정책은 새로이 건설될 정당의 정책강령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뒤의 두 가지 정책을 정책강령으로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동자계급의 내부집단 간에 충분하고 민주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친 뒤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표4) 새로이 건설될 노동자정당의 성격과 주도집단 그리고 건설방식

		노동자와 전국인을 위한정당	경제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재벌해체 해야 경제회복	효율성위 해 민영화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안정	경제회복 위해 복지회생	노동자 경영참가	정당건설, 노조가 주도해야	정당건설 위해 양대노총 연대	99년15월 창당 적절하다	노동자 정당에 가입 하겠다
전체	계: 625명	92.7	64.6	81.6	62.7	92.2	18.5	92.2	80.9	80.3	41.5	72.5
	가중치	3.6737	2.8246	3.2684	2.8151	3.5906	1.7182	3.5839	3.2108	3.1382	-	3.2311
사업장	유의도		*		***	***	**				***	***
주수	최대 최소		75.0, 59.5		72.2, 52.8	93.8, 89.8	23.1, 11.8				43.4, 21.7	81.5, 52.0
소속산별	유의도	***	**	***	***	***	**			*		
	최대 최소	100, 66.7	72.8, 44.8	100.0, 50.0	83.3, 16.9	100.0, 85.7	31.0, 10.8			85.7, 62.1		
업종	유의도	**	**	***	***	***	**			**	**	
	최대 최소	90.8, 66.7	69.7, 54.1	89.2, 50	83.3, 16.9	100, 89.2	26.2, 10.8			83.3, 72.1		
노조설립	유의도		*			**						
년도	최대 최소		65.5, 58.7			93.5, 84.5						
직종	유의도		***	***	**	**	*		**	***	***	
	최대 최소		68.9, 58.8		68.4, 47.1	91.3, 80.5	25.0, 15.5	90.7, 83.8		79.3, 72.1		77.6, 47.1
조합내	유의도		*		**			***		*	*	***
지위	최대 최소		66.2, 52.7		64.2, 46.2			96.8, 88.3		79.9, 74.2		86.0, 67.1
노조가입	유의도		*		***	***				**	**	***
년수	최대 최소		67.0, 59.4		73.4, 52.0	92.9, 85.0			85.1, 68.0	82.4, 67.0		81.4, 51.0
혼인	유의도		***	*	***	***					***	***
성별	최대 최소		66.8, 57.2	86.7, 76.4	67.6, 47.6	92.6, 85.5	33.3, 14.5			80.6, 69.1		74.7, 56.4
학력	유의도	**				**		**			***	**
	최대 최소	95.8, 85.7	69.4, 50.0			92.4, 81.6		94.1, 78.9				74.2, 63.6
연령	유의도		*				**	*	**	***		***
	최대 최소		68.1, 56.6		100, 49.0	100.0, 49.0	27.2, 14.4	92.8, 81.5	81.5, 69.2	78.7, 76.9		76.9, 60.2
본인	유의도		***									*
고향	최대 최소		71.3, 57.4									75.0, 66.7

- 유의도: * p<0.1, ** p<0.05, *** p<0.01 ● %는 찬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
- 가중치 - '적극찬성' 4점, '소극찬성' 3점, '소극반대' 2점, '적극반대' 1점, '잘 모름'은 제외함.
- 최대치 - 각 속성내 집단에서 가장 높은 찬성율, 최소치 - 각 속성내 집단에서 가장 낮은 찬성율

이외에도 정치와 관련된 과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든 노동자들이 7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정국안정(12%), 지역감정극복(4%), 노사정위 강화(2%) 등

**새 정당의 정책강령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지적되어야 할 점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순수자본주의도 아니고 순수(구)사회주의가 아닌
제3의 체제를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의 순이다. 따라서, 새로이 건설될 정당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예, 부패방지법, 검 경찰의 독립성 강화 내지 특별검사제 도입, 감사원 선관위 공정거래위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등)들을 정책공약 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새 정당의 정책강령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지적되어야 할 점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순수자본주의도 아니고 순수(구)사회주의가 아닌 '제3의 체제'를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표5>에서 보듯이,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우리가 취해야 할 체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조사시기와 소속상급노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순수)사회주의를 지지한 노동자는 10%미만으로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순수)자본주의를 지지한 노동자도 40%내외에 그쳤다. 40~50%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형 내지 수정형을 지지하였다. 노동자들의 이러한 이념적 지향성은 지금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것은 최근에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고실업이나 빈부격차 그리고 사회적 혼란의 가중이라는 모순을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5> 이념적 정향성

연도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민주의	제3의체제	두체제공존	기 타	잘 모름
92년	전노협	26.7	6.4	-	41.7	12.3	-	12.8
	한국노총	40.3	2.9	-	36.8	10.9	-	9.0
93년	전노협	43.3	1.0	-	32.0	17.5	-	6.2
	한국노총	50.6	1.1	-	31.0	10.4	-	6.9
94년	전노대	44.8	5.6	-	28.2	12.3	-	9.1
	한국노총	41.0	6.8	-	31.8	11.3	-	9.1
	한국노총	41.6	10.6	-	22.3	12.5	-	13.1
97년	민주노총	-	-	-	-	-	-	-
	한국노총	46.2	4.6	14.3	-	21.4	1.2	11.7

* 출처: 92~94년 - 전국노동자신문사와 필자의 공동조사(윤진호 정영태, 「한국노총과 전노대의 조화된 의식 비교연구」, 《사회·경제평론》 제8집 (1995)
94년(아래 줄) - 「한국노동자 정치의식연구II」(한국노총 1994)
97년 - 「한국노동자 정치의식연구III」(한국노총 1997)

그 다음, 새로운 정당의 건설을 주도해야 할 집단에 대한 노동자들의 판단을 보기로 한다.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새 정당은 노동조합이 주도해서 건설해야 하며(위의 <표4>의 여덟 번째 칸), 노동조합이 정당건설을 주도해야 한다면 그것은 기업단위노조나 산별연맹이 아니라 바로 민주노총이어야 하고(<표6>와 <표7>),⁶⁾ 새 정당을 보다 효율적이고 강한 정당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양대노총이 연대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표4>의 아홉 번째 칸). 또한 적지 않은 노동자들은 새 정당을 성공적으로 건설 운영하기 위해서는 양대노총이 연대하는 것은 물론 시민단체와의 밀접한 협조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뒤의 <표10>).

<표6> 각 수준의 노조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

수준	실리향상	단위노조 지원	조직기반 확대	제도개선	주택· 물가·교육	정당건설	기타	잘 모름	인원
단위노조	65.9	19.9	7.6	2.2	.5	1.5	.2	2.2	602
산별연맹	12.2	22.7	46.1	12.0	2.3	1.7	.0	3.0	549
민주노총	11.0	4.2	8.2	39.6	10.6	23.1	.2	3.2	601

<표7> 민주노총이 추구해야 할 정치활동의 유형

		암력단체	정책연합	기존정당과 연대	새 정당 건설	모름
98년 민주노총	인원: 626명	10.7	21.1	6.7	49.0	12.5
98년 한국노총	인원: 2111명	12.8	36.3	8.5	16.7	25.7

● 유의도: * p<0.1, ** p<0.05, *** p<0.01

네 번째, 새정당의 건설시점에 대한 노동자들의 생각을 보면, <표7>에서 보듯이, 60~70%의 노동자들이 2000년 총선까지 새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경우, 국승21에서 올 5월까지의 창당을 목표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 23%가 '늦다'고 답하고, 42%가 '적절하다'고 답하여 전체 65%가 올 5월까지의 창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경우, 현재 '국민회의와의 정책연합' 노선에 기대를 갖고 있는 탓인지, 약 1/4정도만이 '지금 당장'(아마도 올 5월 이전)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약 35%의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내년 총선까지 건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노동자들

6) 노동조합이 새 정당건설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노동자계층내의 계층간 편차는 통계적으로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다. 그러나, 민주노총 조합원과 한국노총 조합원간의 인식차는 대단히 크다. <표6>에서 보듯이, 전자의 경우 민주노총이 추구해야 할 정치활동의 유형으로 가장 언급하고 있는 것은 '새정당건설'(49%)인 반면, 후자의 경우 정책연합(36%)이다.



60~70%의 노동자들이 2000년 총선까지 새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진은 98년 지방선거 당시 군포시장에 당선된 김영주 지역본부장의 선거운동.

의 태도를 근거로 할때, 새 정당은 2000년 총선무렵까지 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표8〉 노동자정당 건설 시기

건설 시기	민주노동	한국노동
1998.11~1999.5 (국승2의 목표)	64.4 ¹⁾	25.6 ²⁾
1999. 5~16대 총선 (1999. 5~2000.4)	11.1 ³⁾	35.2
16대 총선~16대 대선 (2000.4~2002.12)	6.3 ⁴⁾	17.9
16대 대선~17대 총선 (2000.12~2004.4)		10.5
17대 총선~17대 대선 (2004. 4~2007.12)		2.8
17대 대선~18대 총선 (2007.12~2008.4)		2.6
18대 총선~18대 대선 (2008. 4~2012.12)		5.3

* 주: 1) 너무 늦다 (7.2%) + 조금 늦다 (15.7%) + 적절하다 (41.5%)

2) 지금 당장 3) 조금 이르다 4) 너무 이르다

3. 새로운 정당건설의 장애요인

지금까지 노동자와 민중(또는 국민대중)을 위한 새로운 정당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 보았다. 여기서는 정당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요인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을 보기로 한다. 앞에서도 이미 보았듯이, 압도적인 다수의 노동자들은 정치관계법이나 기존정당의 기득권 등과 같은 노동자·노조의 외부에 존재하는 조건 때문에 새 정당건설이 힘을 얻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노동자·노조의 내부에 존재하는 장애요인을 지적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앞의 <표3>을 다시 보면, 노동자정당의 건설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든 것은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각종 법률이나 제도로 그 비율이 45%이고, 다음으로 기존정당이나 정치인의 기득권(지역사회에서의 기반, 인맥 등)과 방해 21%, 지역감정 13% 등과 같은 순으로, 객관적인 요인을 든 노동자들이 83%로 압도적인 다수에 해당된다. 노동자나 노조의 내부에 존재하는 요인으로는 일반노동자들과 괴리된 상층부 중심의 정당건설방식을 든 이가 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입단투에 집중하는 경제주의적 노조활동방식을 든 이가 5%, 노조의 미약한 조직역량이나 정치력 4% 등의 순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인식은 정당건설의 문제점을 논의한 기존의 연구결과에

7) 서울 관악구에서 총선후보로 출마하고 지역운동을 꾸준히 전개해온 한 진보인사는 관악구의 같은 빈민촌에서는 한나라당이나 국민회의와 같은 기존 보수정당이 근 50년동안 활동해 오면서 국회의원외의 경우 조직원이 6천명에 달할 정도로 지역사회에서의 기반을 탄탄히 닦아 놓았으며 관료사회와의 오랜 교류로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등 많은 특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비해 진보진영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할지 길어야 10년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진보세력의 중요한 기반이 될 노동자들의 지역운동은 물론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미미하여 기존 정당을 넘어서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면담을 한 경기도 안산시의 한 활동가도 비슷한 지적을 하였다(1998.6.12). 그러나, 안산시의 경우 서울 관악구와는 달리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고 평상시 미조직노동자나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추진해온 탓인지 민주노총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 선거에서 노동계후보 또는 진보연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편이었다고 하면서도, 선거운동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1998.8.23). 이에 비해 대전 대덕구의 과학기술노조는 95년 이후 매년 1차례씩 개최한 시민축적인 김천축제와, 평상시 인근 농민에 대한 봉사활동(농기계수리)을 통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축적해 선거에서 조금만 노력해도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정계로 진출한 진보인사와의 관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는데다가, 상대방에 대한 잘못되거나 '과도한' 기대로 말미암아 오해와 불신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을 대전 대덕구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1998.9.5). 노조와 노동계정치인 사이에 오해와 불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울산의 현대그룹노조간담회의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알고 있듯이, 현대자동차에서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노자(勞資)간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현대노조원들은 9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계급적 단결과 지역주민에 대한 호소력을 표출하며, 2명의 구청장과 3명의 시의원을 당선시켰다. 그러나, 시의원으로서 당선된 한 노동계인사에 의하면, 선거가 끝난 후 노조는 지방정부로 진출한 노동계정치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소홀히 함으로써 후자가 충실하고 능력있는 구청장 또는 시의원이 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갖게 만들었다고 한다(1998.9.20~21). 진보인사 또는 노동계 정치인과의, 밀연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노조나 조합원들이 제도정치나 거기에 진출한 노동계 정치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또는 정치색력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노조와 노동계정치인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반면 거문대 '구차한' 면담에 응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새 정당의 필요성과 정책강령은 물론 현정권의 정책이나 행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노동자계급의 내부집단간 (예, 영남출신과 호남출신간, 집행부간부와 평조합원간) 차이가 대단히 크다는 점이다.

.....

서 크게 다르지 않으며, 필자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이민영 실장이 서울 관악구, 경기도 안산, 대전, 울산, 광주 등 전국 각 지역의 노조간부나 진보적인 정치인사들과 행한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⁷⁾ 다만, 여기서는 노동자들이 직접 지적하지 않았으나 다른 문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사항들을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새 정당의 필요성과 정책강령은 물론 현정권의 정책이나 행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노동자계급의 내부집단간 (예, 영남출신과 호남출신간, 집행부간부와 평조합원간) 차이가 대단히 크다는 점이다. 특히, <표4>에서 보듯이, 노동자계급의 내부집단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예, 민영화, 외국인투자유치 등)과 현정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선거에서의 투표행태에 있어서는 소속산별이나 업종, 직종, 연령, 출신지역 등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지 않는 한, 새 정당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선거에 들어가면 노동자들이 통일된 행동을 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표8> 참조).

다음으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방금 지적한 노동자들의 의식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과 경험의 중요성이다. 노조가 주관하는 교육은 민주노총본부나 지역본부 또는 산별연맹본부 수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 총파업과 같은 전체집회 등에서의 연설이나 경과보고 등에 거의 한정되어 있으며, 단위노조 수준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교육이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전자의 경우에도 그 대상이 주로 단위노조간부나 지역본부/산별노조 간부들에 국한되어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98년 1~2월 사이 11개 노조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아주 만족' 2점, '아주 불만족' -2점, '그저그렇다' 0점으로 했을 때 노조상집간부 -0.17점, 의원·운영위원 등 의결기구간부 -0.20점이었으나, 일반조합원들의 교육기회에 대한 만족도는 -0.40점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대의원·소위원과의 대화기회는 약 2주일에 한 번, 상근간부와 의 대화기회는 한 달에 한번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이원보 외, 1998). 특히 정치에 대한 정보나 교육이 거의 보수언론에 의해 장악되어 있어, 그 폐해는 더욱

(표9) 가상대선에서의 노동자투표행태

		98년 11월에 다시 대선을 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							
		김대중	미희창	김종필	이인제	권영길	이우성	기타	기권
사업장 주소***	수도권	22.6%	4.2%		5.0%	35.6%	0.4%	3.4%	28.7%
	부산경남	6.4%	4.7%	0.6%	5.8%	49.7%	1.2%	1.2%	30.4%
	대구경북	13.0%	17.4%		8.7%	13.0%		8.7%	39.1%
	광주전라	49.1%	1.9%		4.7%	25.5%	0.9%		17.9%
	대전충청	15.6%	1.6%	1.6%	6.3%	40.6%			34.4%
소속 산별*	건설연맹	16.7%	16.7%			33.3%			33.3%
	공익노련	13.8%	3.4%		6.9%	37.9%			37.9%
	민주급속	20.4%	4.0%	0.3%	5.0%	42.1%	0.7%	2.3%	25.1%
	민주철도	15.6%	1.6%		9.4%	25.0%	1.6%	1.6%	45.9%
	민주화학	24.6%	3.3%	0.8%	2.5%	45.1%			23.8%
	보건의료노조	25.5%	6.1%		8.2%	22.4%	1.0%	5.1%	31.6%
사무원노련	57.1%	14.3%			26.8%				
업종**	제조업	21.6%	3.8%	0.5%	4.3%	43.0%	0.5%	1.7%	24.7%
	건설업	16.7%	16.7%			33.3%			33.3%
	운수통신업	15.6%	1.6%		9.4%	25.0%	1.6%	1.6%	45.3%
	금융보험업	18.6%	10.2%		6.8%	27.1%		3.4%	33.9%
	공공서비스업	29.3%	2.7%		8.0%	25.3%	1.3%	4.0%	29.3%
노조 설립 연도***	87년이전	26.1%	4.3%		2.2%	50.0%		2.2%	15.2%
	87-92년	17.7%	4.7%	0.4%	6.2%	38.5%	0.6%	1.7%	30.2%
	93년이후	35.1%	1.8%		1.8%	29.8%	1.8%	7.0%	22.8%
직종***	분류불라	19.2%	4.5%	0.5%	4.2%	46.5%	0.8%	1.8%	22.6%
	화이트칼라	25.4%	6.3%		6.0%	22.4%	1.5%	3.0%	35.8%
	신중간계급	26.6%	3.2%		7.0%	21.5%		2.5%	39.2%
	기타	17.6%			11.8%	47.1%			23.5%
조합내 지위 ***	원조합원	23.7%	5.2%	0.5%	6.3%	29.8%	0.9%	2.9%	30.7%
	위원장/간부	8.9%	1.1%		1.1%	70.0%			18.9%
	대/소위원	23.0%	2.3%		4.6%	43.7%			26.4%
노조 가입 년수***	2년이하	25.8%	3.1%		8.2%	15.5%	1.0%	5.2%	47.2%
	3-5년	22.6%	1.8%		5.4%	35.7%		1.8%	32.7%
	6-9년	20.9%	5.1%		3.4%	44.1%		1.7%	24.9%
	10년이상	19.1%	6.0%	1.1%	6.0%	44.3%	1.6%	1.1%	20.8%
혼인 성별***	미혼여성	23.8%	9.1%		3.6%	18.2%		7.3%	38.2%
	기혼여성	20.0%	7.3%		10.9%	25.5%		7.3%	29.1%
	미혼남성	19.7%	2.1%		2.8%	42.3%		0.7%	32.4%
	기혼남성	22.0%	3.8%	0.5%	5.7%	40.7%	1.1%	1.1%	25.2%
학력***	중졸이하	7.9%	7.9%		5.3%	55.3%	2.6%	5.3%	15.8%
	고졸	19.7%	3.0%	0.5%	4.6%	42.4%	0.3%	2.2%	27.3%
	전문대	24.1%	4.3%		6.9%	29.3%		1.7%	33.6%
	대학이상	31.6%	7.1%		6.1%	21.4%	2.0%	1.0%	30.6%
연령	20대	22.8%	3.6%		4.7%	31.1%	0.5%	3.1%	34.2%
	30대	23.5%	3.5%	0.3%	4.5%	40.6%	1.0%	1.3%	25.2%
	40대	15.2%	6.3%	1.3%	11.4%	36.7%		1.3%	27.8%
	50세이상	23.1%	7.7%			38.5%		7.7%	23.1%
본인 고함***	경인/강원	16.6%	4.5%		5.7%	34.4%	1.3%	3.8%	33.8%
	충청	16.5%	1.1%	2.2%	11.0%	44.0%			25.3%
	전라	39.3%	1.4%		3.3%	28.0%	0.5%	0.5%	27.0%
	경상	6.7%	10.0%		4.0%	50.0%	0.7%	3.3%	25.3%
	기타	6.3%			12.5%	37.5%		6.3%	37.5%

● 유의도: * p<0.1, ** p<0.05, *** p<0.01

심각하다. 그 결과는 일반조합원들이 우리 사회와 정치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보수언론·방송에서 얻게 되고, 따라서 대부분 조합원들의 의식은 보수정치인이나 언론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표9〉).⁸⁾

〈표9〉 정치에 대한 정보원과 주로 보는 일간지

정치정보원	94년	97년	98년	주로 보는 일간지	97년	98년
	한국노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중앙 일간지	37.3	41.2	39.1	보수중앙지	80.2	58.4
TV/라디오	56.5	54.2	49.4	한겨레신문	10.2	31.4
노조관련매체	2.6	1.8	5.3	지방일간지	9.6 ²⁾	3.3
직장동료	1.5	1.5	0.8	스포츠오락지		5.2
친구 / 이웃	0.5	0.2	0.3	기타		1.8
시민 사회단체	0.7	0.4	0.3			
기타	0.9	0.6	4.8 ¹⁾			

주: 1) 주간지(4.2%) + 기타(0.6%)

2) 조선, 동아, 한국, 중앙 이외의 중앙지와, 경제신문 그리고 스포츠지

출처: 94년 - 『한국노동자 정치의식연구II』(한국노총 1994).

97년 - 『한국노동자 정치의식연구III』(한국노총 1997)

4. 새 정당건설을 위한 선결과제

노동자와 민중(또는 국민대중)을 위한 새로운 정당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장애요인들을 극복해야할 것이다. 여기서는 '새 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노동자들의 답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자. 〈표10〉에서 보듯이, 새 정당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산별노조건설과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등을 통한 노조의 조직역량강화로, 그 비율이 33%이다. 다음으로 정치관계법개정(30%), 임단투 중심의 노조활동방식극복(15%), 지역감정극복(13%), 다른 시민 사회단체와의 연대강화(7%) 등의 순이다.

노동자들이 지적하는 과제들은 우리 사회에서의 노동자정당건설에 대한 논의들에서도 이미 언급된 것들로,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 본다. 다만, 여

8) 방금 인용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조사결과에서도 정치에 대한 의식이 다른 분야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왔다(이원보 외, 1998: 53).

기서는 한가지만 더 언급하고자 한다. 그것은 노조의 조직력강화가 새 정당건설을 위한 선결과제임에는 틀림없으나, 이것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받아들여 시간적 선후관계로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산별노조건설 등에 의한 조직강화는 노동자계급의 실질적인 단결(solidarity)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지나지 않으며, 60~70년대의 일본에서처럼 기업별노조체제를 가진 나라에서도 정당을 매개로 하여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별노조건설 등에 조직강화는 정당건설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단결을 강화하는 과제와 병행될 수 있고 또한 그래야 한다. 물론 조직강화와 정당건설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각급노조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단위노조(특히 여력이 있는 대기업노조)들은 인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함으로써 두 과제가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산별노조건설 등과 같은 조직강화사업은 주로 산별연맹이 맡고, 정당건설과 같은 정치사업은 민주노총이나 지역본부가 맡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11〉 노동자정당건설을 위한 선결과제

노동자건설을 위한 과제	1순위	2순위	1순위+2순위
지역감정의 극복	13.3	3.2	16.5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30.0	13.2	43.2
임단투 중심의 노조활동방식 극복	14.5	7.8	22.3
산별노조 건설 등 노조의 조직역량 강화	33.4	37.6	71.0
다른 시민 사회단체와의 연대강화	6.7	35.8	42.5
기타	0.3	0.3	0.6
잘 모르겠다	1.7	2.0	3.7
인원	593	593	1186

5. 맺는 말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의식을 통해서 새로운 정당건설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 보았다. 이제 노동자와 노동운동에 결코 유리할 수 없는 '반복반공보수세력'에 의한 정치권 독점이라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노동자와 민중(또는 국민대중)을 위한 독자정당이 시급히 건설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조사결과에 비추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이 글을 끝맺으려 한다.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실현되지 못한 것을 정치관계법이나 보수일변도의 지역주의적 정치구도와 같은 노동자계급의 바깥에 존재하는 조건 탓으로 돌리고 주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방기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

①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실현되지 못한 것을 정치관계법이나 보수 일변도의 지역주의적 정치구도와 같은 노동자계급의 바깥에 존재하는 조건 탓으로 돌리고 주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방기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 글의 머리 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객관적 조건은 갈등관계에 놓여 있는 인간집단간 대립과 투쟁 또는 협조에 의해 유지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한다는 점과, 기존 정당을 포함한 다른 집단이 노동자들이 강하게 요구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러한 객관적 조건을 바꾸어 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객관적 조건의 변화는 결코 노동자를 포함한 기층대중들과 이들을 위해 투쟁하는 활동가들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 특히,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노동자와 민중을 위한 새로운 정당은 노조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과(표4)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조만큼 확실하고 탄탄한 조직과 재정력을 가진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조합(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지도부는 정리해고와 소득감소라는 당연한 어려움에 부딪혀 경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당건설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여야 할 것이다.

② 빠른 시일 안에 새 정당을 필요로 하는 모든 단체의 상층간부 간에 정치세력화에 관한 의견을 통일하고, 분열과 혼돈 속에 방기되어 보수정당과 언론들에 의해 조작·동원되고 있는 일반노동자들에 대한 정치교육과 훈련을 시급히 그러나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상층간부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산별연맹이나 지역본부에 의한 대중교육은 일반노동자들의 분열과 갈 등을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진보정당 창당제안 원탁회의'와 같은 모임이 더욱 확대되어 모든 민주세력이 참여하고 새 정당에 대한 합의를 끌어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없이 좋을 것이다.

③ 새 정당건설을 바라는 모든 인사들을 개인의 물질주의적 가치 실현(pos-

sessive individualism)을 가장 앞세우는 자본주의적 논리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단기적인 물질적 행복을 희생할 각오가 없으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피차배계급은 결코 계급적 단결을 이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다 나은 사회의 실현이라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간부나 활동가는 개인의 권력욕이나 명예욕을,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자리나 임금인상을 잠깐동안만 유예하면 계급적 단결은 보다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원보 외 1998, 『희망찬 21세기를 열기 위한 노동조합활동』,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정영태 1998a, 「15대 대선, 김대중정권, 그리고 민주주의」, 《경제와 사회》 제37호, 봄
- 정영태 1998b,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시적 발전론에 대한 비판」, 《노동사회》 제21호, 4월
- 정영태 1998c, 「제2회 지방선거와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동사회》 제24호, 7 8월
- 조준상 1999, 「'경쟁질서' 창조 가능할까 - 아시아적 가치 등 경제이론 혼재」, 《한겨레 21》 제241호, 1월 14일
- 캘리니코스 (김용학 역) 1987, 『역사와 행위』, 교보문고 (原典: Alex Callinicos, Making History: Agency Structure and Change in Social Theory, Basil Blackwell)